

■ 르포 시름 잠긴 '하늘 아래 첫 동네' 지리산 심원마을

산길 막히고 살길 막혀 '고립무원'

'예산 부족' 이주 사업 4년째 표류
등산로 폐쇄로 관광객 발길도 '뚝'
20가구 주민 54명 생계 대책 호소

봄 기운이 들쭉날쭉한 30일,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심원(深遠·해발 750m)마을을 찾았다. 어귀에 들어서자 굴피·달래·두릅 등 이전에 낯선 산나물이 낮은 손님을 먼저 반겼다. 옛 정취가 그대로 살아있는 가옥과 식당, 민박집들을 한 바퀴 돌아 앞산 종턱에 오르자 7만9천32㎡(2만3천907평) 규모의 마을 정경이 한 눈에 펼쳐졌다.

대상에 포함됐다. 당초 남부사무소는 오는 2011년까지 예산 240억원을 투입, 마을을 이주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부족 등으로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환경부가 추진 중인 북한산-지리산 등 국립공원 내 이주복원사업의 우선 순위에서 계속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남부사무소는 그동안 예산 지원을 요구하는 공문을 환경부에 수차례 보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이 마을엔 20가구 54명이

살고 있다. 별꼴을 치고 흑염소를 기르던 과거와 달리 이들은 민박집과 식당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리고 있다. 그러나 이주계획이 알려지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뜸해졌다. 이미 사라진 마을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지리산에 반달가슴곰이 방사되면서 이 마을을 가로질러 반야봉·천왕봉·노고단으로 향하는 주요 등산로도 폐쇄됐다. 등산객들도 발길을 돌렸다. 주민들은 "여름이면 하루 평균 2천여 명의 피서객들이 찾았으나 이주계획 발표 이후 1천여 명으로 50%가량 감소했다"고 호소했다.

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케이블카가 설치될 경우 관광객이 더욱 줄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청와대와 환경부 등에 "적절한 보상 후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한 상태다. 심원마을 김학철(62)씨는 "누가 '이주시켜달라'는 것도 아닌데, 괜히 장미빛구상만 늘어와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언제나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 이주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산길이 막힌 상태에서 하늘 길마저 블 경우 마을은 고립무원에 빠지게 된다"고 반박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구례=이진택기자 ik5826@



봄 기운이 완연한 30일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심원마을에 사는 한 주민이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집 마당에서 딸감으로 사용될 장작을 패고 있다. 심원마을 주민 54명은 이주복원 사업계획이 4년째 답보상태에 머무르면서 오도기도 못할 처지에 놓여 있다. /위정희기자 jrwi@kwangju.co.kr

5·18 민주열사 비석이 하수구 덮개로

인근 주차장서 사용

광주시 북구 망월동 5·18 옛 도역에 인장된 민주열사의 비석(가로 20cm, 세로 60cm)이 하수구 덮개로 사용돼 물의를 빚고 있다. (재)광주무등묘원에 따르면 민주열사의 비석 2개가 5·18 옛 도역 인근

주차장 한 곳의 하수구 덮개로 사용 중인 사실을 30일 확인했다. 이 비석은 지난해 민주열사 2명의 가묘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됐으나 유족들이 하자가 있다며 폐기했다고 무등묘원측은 주장했다. 무등묘원 측은 이 비석을 폐기된 비석을 모아놓는 공간에 가져다 놓았

으나 지난 1월께 하수구 공사를 하면서 누군가 이 비석을 덮개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등묘원은 31일 하수구 덮개로 사용 중인 비석을 빼내 폐기할 계획이다. 한편 5·18 옛 도역에는 민주열사 묘지 37기가 조성돼 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성매매 안마시술소 업주 구속

광주지방경찰청은 30일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정모(39)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여중업원 일부 27명 등 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건물 1층 입구에 감시용 CCTV를 설치하고 밀실로 연결된 출입문을 벽처럼 위장해 경찰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박연수 진도군수 곧 소환

검찰, 수천만원 뇌물 준 사업자 구속

검찰이 박연수 진도군수에게 수천만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50대 업자를 구속하고 박 군수를 조간간 소환키로 하는 등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길수)는 30일 판공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박 군수에게 현금 3천만원을 준 전씨를 테마파크 사업체 A사 대표 문모(52)씨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2006년 8월 17일께 진도군 진도읍 박 군수의 관사서에서 "군이 발주한 흥주체험관 등 전씨를 설치공사를 수주하게 해달라"며 문씨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문씨가 수의계약 업체 선정에서 탈락하자 지난해 12월 10일께 박 군수에게 "약속을 어겼으니 차용

금을 갚아라"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해 6일 뒤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문씨가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우편물 등을 통해 위압적인 말투로 박 군수의 지니나 명성을 떨어뜨릴 것처럼 허박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갈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박 군수가 영구 출장을 마치고 31일 출근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소환 시기를 검토 중이다. 이밖에도 검찰은 박 군수가 직원인 사 과정에서 3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진도군 울돌목에 조선소를 조성 중인 업체로부터 수억 원대의 뇌물을 받았다는 첩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니원침 (7766) 김동주



"지자체간 공무원 인사교류도"

근무조건 관련 땀 교섭 대상"

법원 첫 판결
공무원의 인사교류도 '근무조건'과 관련이 있다면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그동안 전보·전직 등 임용권 행사와 관련 교섭권 인정에 소극적이던 관행에 제동을 거는 첫 판결로, 향후 노조의 교섭권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30일 공무원노동조합 전 남연맹이 "전남도청과의 교섭권이 없다는 판정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사교류는 도의 임용권에 속하지만, 조합원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돼 있고 임용권

자체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사교류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려는 것이므로 의무교섭 대상"이라고 밝혔다. 전남도청공무원노조와 담양 등 전남지역 6개 군(郡) 공무원노조로 구성된 전남연맹은 지난해 3월 20일 전남도가 연맹의 인사교류 개선 등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는 전남도의 교섭 거부가 부당 노동행위라고 판단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연맹이 도청 노조에게서 교섭권을 위임받지 않았으므로 도가 교섭대표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결정을 뒤집었다. 이에 연맹은 "인사교류가 '근무조건'에 영향을 미치고 소속 단위노조 전체와 전남도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도가 교섭에 응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경희기자 choice@

결혼자금 고민 30대 女 자살

29일 오후 6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류모(31)씨의 집에서 류씨가 방에 연탄 화덕을 피워놓고 숨져 있는 것을 동생(28)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류씨가 남긴 유서에는 '혼담이 오갔던 남자친구와 결혼자금을 이유로 헤어진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김형호기자 khh@

'바다 뽕소니' 용의자는 외국 선박

○여수해양경찰이 최근 경남 통영시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침몰사고의 유력한 용의자(?)로 외국선적 컨테이너선을 지목하고 조사에 나서 귀추가 주목. ○30일 여수해양에 따르면 지난 28일 광양항에 입항한 컨테이너선이 제주 선적 29㎥ 어선 유진호와 부딪힌 뒤 달아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선박에 묻은 페인트 등 시료를 채취, 국과수에 성분분석을 의뢰. ○해경에 따르면 이 배는 유진호 침몰 당시 인근 항로를 지난 데다 선수 아래쪽에 물체와 부딪히고 굽힌 흔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유력한 '뽕소니' 용의자로 지목. ○유진호는 지난 28일 오후 5시께 통영시 옥지도 남쪽 42마일 해상에서 뒤집힌 채 발견.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취업 시기' 전 한나라당 전남도당 간부 영장

나주경찰은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수배된 전 한나라당 간부 원모(60)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씨는 공병 2명과 함께 국회와 지자체 공무원, 대기업 직원 등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2006년부터 지

난해 7월까지 34명으로부터 13억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챘을 혐의다. 원씨는 한나라당 전남도당 대변인 및 지구당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한나라당 전남도당은 지난해 9월 윤리위원회를 열어 원씨를 당원에서 제명했다. /나주=최홍순기자 srchoi@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since 2005.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자산동 714-73 [2층] (법원앞에서 자산주유소쪽으로 7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제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제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을만 추천합니다.

"정부 지원 태양광 발전주택" (주목고품질가치상승 및 반영구적 무료전기사용) 2009년 전남지역 신재생에너지 보조지원금 60% 선착순 신청접수!! 정부무상국비보조지원금 60%, 자기부담금 40%내에서 확정! ※태양광 정부무상보조금 지원신청접수※.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고유가와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피해를 막기 위한 무안정전 전략적이지민 태양광 주택을 전국 각주인 5% 보급(OCD)을 위한 2009년도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주택에 비용 0% (약125만원)를 정부에서 무상보조하므로 자신의 가처분 에너지 전기를 반영구적 자기를 전 하므로서 가장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정부에서는 전국에 2009년도 태양광 발전주택 보급을 4400가 신청 시공할 예정이오니 전기요금 월12만원이상 사용하는 주택은 지금 바로 신청 접수하기 바랍니다. (선착순 접수마감함).